

문 24.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 제도의 근거 법률로 묶인 것은?

- ㄱ. 산업재해보상보험법
 ㄴ. 장애인복지법
 ㄷ.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 ㄹ. 의료급여법
 ㅁ. 국민연금법

- ① ㄱ, ㄴ
 ② ㄱ, ㄷ
 ③ ㄱ, ㅁ
 ④ ㄴ, ㄷ
 ⑤ ㄷ, ㅁ

문 25.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상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- ①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야유회에 참가하여 발생한 사고
 ②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
 ③ 업무시간 중 개인적인 사유로 외출 후 사업장으로 돌아오던 도중에 발생한 사고
 ④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
 ⑤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

경 제 법

문 1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상 용어 정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- ㄱ. "지주회사"라 함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 및 외국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이다.
 ㄴ. "계열회사"라 함은 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.
 ㄷ. "사업자단체"라 함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.
 ㄹ. "일정한 거래분야"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·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.

- ① ㄱ, ㄴ, ㄷ
 ② ㄱ, ㄷ
 ③ ㄴ, ㄷ
 ④ ㄴ, ㄷ, ㄹ
 ⑤ ㄴ, ㄹ

문 2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조의2 제1항에 열거된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의 유형이 아닌 것은?

- ①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하는 행위
 ②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
 ③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
 ④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
 ⑤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

문 3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상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?

-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상호출자 금지
 ②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지주회사의 설립 제한
 ③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
 ④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
 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

문 4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대상인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)

- ① 사립대학교는 위 법상의 사업자가 될 수 있다.
 ② 농업·임업을 영위하는 자는 위 법상의 사업자가 될 수 있다.
 ③ 사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자이어야 한다.
 ④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종업원은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업자로 본다.
 ⑤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사업자에 포함된다.

문 12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.
- ② 지주회사 설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한다.
-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.
-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,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게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보고 등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.

문 13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)

-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-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징수 또는 채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원의 판결을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-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당해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.

문 14. 「소비자기본법」상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은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.
- ②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구제의 신청은 서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.
- ③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.
- ④ 피해구제의 신청이나 의뢰를 받은 한국소비자원은 지체 없이 피해구제신청사건의 당사자와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- ⑤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은 피해구제신청의 내용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그 사건의 처리를 중지할 수 있다.

문 15. 「소비자기본법」상 단체소송에 관한 제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?

- ① 전속관할
- ② 법원의 소송허가
- ③ 분쟁조정전치주의
- ④ 원고에 대한 변호사소송대리 강제
- ⑤ 원고가 될 수 있는 소비자단체의 요건 제한

문 16.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을 공시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.
- ② 사업자가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.
- ③ 사업자가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의 약관에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고객의 유·불리를 불문하고 그 약관은 전부 무효로 한다.
- ④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위 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다수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조사하여 불공정 약관조항이 있는 경우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심사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.

문 17.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상 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)

- ① 설명의무의 이행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.
- ② 사업자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은 해당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.
- ③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약은 일반적으로 보험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이다.
- ④ 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에게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다.
- ⑤ 약관내용이 추상적·개괄적으로 소개되어 있을 뿐인 보험계약의 청약을 유인하는 안내문을 송부한 것만으로는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.

문 18.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상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는?

- ① 사업자단체
- ② 「소비자기본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
- ③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
- ④ 당해 약관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
- ⑤ 「소비자기본법」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

문 19.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상 불공정약관조항의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심사청구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약관조항을 심사하여 시정조치 등을 할 수 있다.
-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조항을 불공정하다고 의결한 경우 해당 약관조항의 불공정성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하여 다툴 수 없다.
- ③ 행정관청이 인가한 약관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약관내용의 불공정성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.
-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다고 심의·의결한 약관조항의 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이를 이해당사자에 한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.
- ⑤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약관조항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문 20. 甲은 방문판매 방식을 통하여 할부거래업자인 乙과 위인전 집을 구입하는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위인전집을 계약서와 함께 수령하였다. 다음 중 「할부거래에 관한 법률」상 甲이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甲과 乙 사이의 할부계약이 취소된 경우
- ② 甲이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위인전집을 수령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청약을 철회한 경우
- ③ 乙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- ④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
- ⑤ 위인전집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멸실된 경우

문 21. 「할부거래에 관한 법률」상 할부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소비자는 기한이 되기 전이라도 나머지 할부금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.
- ②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.
- ③ 할부계약에 의한 할부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.
- ④ 소비자가 할부금 지급거절의 항변권을 서면으로 행사하는 경우 그 효력은 서면이 도달한 날에 발생한다.
- ⑤ 소비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함으로써 국내에서 할부금 채무이행 보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할부금의 지급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.

문 22. 「할부거래에 관한 법률」상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위 법상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소비자가 재화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한 후에만 사업자로부터 재화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으로 정의되어 있다.
- ② 제공시기가 확정된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도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이 된다.

- ③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되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위약금을 공제하여 환급할 수는 없고 이를 별도로 청구하여야 한다.
- ④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법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한 예치금은 누구도 가압류·압류·상계할 수 없다.
- ⑤ 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자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.

문 23.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위 법은 다단계판매원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재화를 구입하는 거래에 적용된다.
- ② 다른 법률에 계약서교부의무의 이행방법에 관하여 위 법과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위 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.
- ③ 위 법은 사업자가 소득기회를 알선·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유인하여 재화를 구입하게 하는 거래에 적용된다.
- ④ 위 법은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재화를 구입하는 거래에 적용된다.
- ⑤ 위 법은 전화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재화를 판매하는 거래에 적용된다.

문 24.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방문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- ②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원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한 경우 우선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청약철회를 하여야 한다.
- ③ 청약철회시 소비자와 방문판매자는 원상회복의무를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.
- ④ 방문판매계약을 체결한 자와 대금을 지급받은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이들은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환급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각각 분할책임을 진다.
- ⑤ 청약철회시 방문판매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

문 25.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상 통신판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- ① 우편에 의한 판매
- ② 광고시설물에 의한 판매
- ③ 방송에 의한 판매
- ④ 전화권유에 의한 판매
- ⑤ 전단지에 의한 판매